

도내 미등록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

200여 곳 대부분 구도심 위치... 행정지원 못 받아 가마솥 더위에 속수무책

전북지역 미등록 경로당이 복지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민간지원과의 유기적 연계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 6,567곳이다. 이 중 미등록 경로당은 익산시 70곳, 완주군 41곳, 전주시 40곳, 정읍시 32곳, 김제시 11곳, 진안군 4곳 등 200여 곳에 이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인원 20명, 20㎡ 이상의 거실과 화장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경로당이 주로 아파트단지에 집중돼 구도심의 경우는 무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 가까운 미등록 경로당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복지지원 혜택은 누릴수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등록 경로당에는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360여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냉난방

비의 경우 도와 지자체, 정부에서 연간 232만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 연일 30℃를 넘는 가마솥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은 무허가 시설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방시설도 미흡한 곳이 많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완화

하거나 법규를 개정해 미등록된 경로당 이용자들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관우 전주시의원은 "경로당으로서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시설기준,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시설일지라도 사람은 차별 받아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경로당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학교 · 어린이집 ·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1



올림픽이 코 앞인데 브라질 네티료이에서 2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올림픽 성화봉송로에서 정부의 올림픽 예산 집행 부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제압당하고 있다.

전북도청사 내 마을 상품 판매장 '호황'

개점 8개월만에 매출 2억9600만원... 다양한 제품 등이 성공 비결

전북도청사 마을 상품 판매장이 개점 8개월만에 매출 2억9,600만원을 달성했다.

과연 이곳의 성공 비결은 뭘까. 물론 도청사 방문객 등 '위치' 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 비결은 다른 판매장과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것이다.

53개 우수 경영체가 제품을 선보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성향을 파악해 이를 제품개발에 반영하는 테

스트 공간으로 활용했다.

또 운영 주체인 전북농협과 동갑세대 농협에서 마련한 판촉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전북도와 6차 산업활성화 센터가 협업해 진행한 우수 제품 품평회와 입점 현장 코칭을 통해 제품과 포장디자인 면에서 소비자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마을 상품 판매장이 단순 제품 테스트 공간으로서 참여 기관에서는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공간이 되어주고, 소비자에게는 농촌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만나는 도농 교류의 장터로 인식된 점도 한몫했다.

김정모 도 농촌협력과장은 "취급하는 농산물 선별에 각별히 신경쓰고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한게 주요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마을상품(6차제품)의 시장공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내일원 및 수도권 지역에 도내 마을상품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촉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 탄소밸리 협력관 3명 선임

전북도는 탄소산업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탄소밸리 협력관'을 선임 운영한다.



박수진 협력관, 이영석 협력관, 신현규 협력관

탄소밸리 협력관은 탄소산업 정책자문 및 대외관계 지원 역할 등을 상시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탄소밸리 협력관은 인하대학교 박수진 교수(물리화학부), 충남대학교 이영석 교수(응용화학공학과), 코오롱 신현규 이사 등 3명이다.

인하대학교 박수진 교수는 "2016 재료과학·공학분야 논문 최다 피인용 연구자 300인에 선정된 탄소소재분야의 국제적인 석학이다."

충남대학교 이영석 교수는 "탄소화학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해마다 국제탄소포럼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전북 탄소산업 발전

을 위하여 기여해 왔다.

코오롱 신현규 이사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재직하는 동안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대학, 기관 및 연구소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등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해왔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라북도의 핵심 아젠다인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분들을 많이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원룸·다가구 상세주소 신청안해도 사전통보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급상향 등 대처 위해

앞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층·호수 등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사전통보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청하면 부여했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것과 달리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신청을 해야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임차인의 바쁜 일상과 관심 소홀 등에 따라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다.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이에 행정부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신청주의와 병행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통보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 부여가 보편화될 것"이라며 "시장 등의 상세주소 부여 절차와 소유자·임차인 이의신청 방법 등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규정된다"고 말했다. /뉴스1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추진

국정정보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정부 법안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이 법안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외교부 등 정부 부처에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양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